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도마 위… 재고용 검토 목소리도

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정부·여당, 노사입장 조율 나서
야당, 일률적인 고용연장 제도
“우선 양질의 일자리부터 늘려야”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연장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사 입장을 조율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에 우려하며 정치권이 할 일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 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고용 연장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부터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정년연장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년연장에 관계되는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속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위상 의원 등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 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장 고민해야 하는 두 가지 중 첫째는 정책의 수용성”이라며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거부감 없이 국민 속으로 스며들어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다”라고 했다.

이어 “둘째는 어떤 방향 정하고, 한쪽만 바라본다면 쉬운 일 것”이라며 “그러나 정책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그 한쪽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다른 한쪽에서 늘 역효과와 부작용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데 어려운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고용연장 문제가 바로 그렇게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

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지금 여당 그리고 정부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고용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 몇 퍼센트, 반대 몇 퍼센트’ 이렇게 정책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입장이 다를 것이고, 청년들 중에서도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과 아직 가지지 못한 청년, 그리고 아직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직전에 막연하게 그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아직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의 입장이 다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모든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정년연장에 대해 ‘찬성하는가, 찬성하지 않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법적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의 확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법적 정년을 획일적으로 늘리고, 기존 임금, 고용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청년 일자리 감소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 근로자 1명이 될 때 청년근로자 최대 1.5명까지 감소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은 단계적 정년연장과 함께 기업이 선별적으로 재고용을 결정하고 정년연장 대상자에 한해 임금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가 강성 귀족 노조의 반발로 좌초된 현실을 보면 이러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다수는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며 “일본 역시 20년의 시행 끝에 고령자 고용 형태의 중심이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 형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단계적으로 법적 정년을 65세로 최단 2036년과 최장 2041년 사이에 완성하는 연장하는 세 가지 안을 노측과 사측에 전달하고 최종안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유동성 부족에 손해 감수… 재납입 등 전략 필요 “주거비 마련해야”… 퇴직연금 중도 인출 증가

노령연금 조기 수급 증가

1년 마다 6%씩 감액… 최대 30% 차이
지급연기 등 손실 보전 전략 세워야

은퇴 시기와 국민연금 지급 시기의 불일치로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조기 연금은 은퇴 후 소득 공백을 극복하는 주요 수단이지만, 노후가 길어질수록 정상연금 대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 조기 연금 중단,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활용 등 연금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 7월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5년 전인 2020년 7월의 65만명과 비교해 5년 만에 약 54% 증가했다. 지난 2024년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법적 정년이 시작된 만큼, 조기 연금 수급자는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출범과 함께 도입된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금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된다. 올해 법적 정년을 맞은 1965년생(만 64세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을 예시로 들면, 월 지급액을 30% 감액하고 59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시까지 지급을 보장한다.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면 노후가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급을 1년 앞당긴다면 76세(만 65세 수급 개시 기준), 지급을 5년 앞당긴다면 72세에 정상연금에 총 지급액이 역전된다. 월 지급액 차이가 최대 30%



조기 은퇴로 예정보다 빨리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다. 한 시민이 노인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에 달하는 만큼, 연금을 일찍 받을수록 그 차액도 커진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기 노령연금 신청 시 미래에 지급액 역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지만,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을 견디지 못한 중장년층의 조기 노령연금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 중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꼽은 응답자는 58.5%였다. 특히 은퇴가 임박한 50~59세 구간에서는 62.3%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꼽아, 모든 세대 가운데 국민연금의 노후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은퇴를 앞둔 세대의 높은 국민연금 의존도는 소득 공백 발생 시 조기 연금 수령으로 이어진다. 노후 소득 대부분을 국민연금에 의존해야 하는데도, 은퇴 직후 막 닥친 유동성 부족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 지급을 앞당기게 되는 것.

특히 점차 빨라지는 은퇴도 문제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

르면 지난해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퇴직한 나이(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떠난 시기)는 49.4세다. 2020년과 같고, 2010년의 53세와 비교해서는 3년 이상 짧아졌다. 정부는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 극복을 위해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근로자는 법적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자리를 떠나고 있다.

예금·적금, 증권 상품 등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은퇴를 맞이하게 된다면 조기 노령 연금 수령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유동성 부족으로 조기 노령연금을 받게 됐지만 향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납입’ 제도와 ‘임의납입’ 제도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기·재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만, 아직 법정 국민연금 지급 연령은 도래하지 않은 가입자가 대상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납입한 기간에 따라 추후 받게 될 보험료를 다시 늘릴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 납입 대상이 아닌 60~64세의 ‘임의가입’과 유사하다.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소득도 충분하다면 향후 연금소득 극대화를 위해 ‘임의가입’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임의가입은 만 65세 이전까지 임의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납입액에 따라 추후 지급되는 연금액도 커진다. 또한 임의가입 기간은 납입 기간으로도 인정되는 만큼, 연금 지급 기준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가입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안송진 기자 asj1231@

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 통계 발표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직장인 수가 늘고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 및 금액이 모두 전년대비 늘어난 가운데 인출 사유의 대부분은 주택매입·전월세 등 주거비 마련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43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2.9% 증가했다. 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이며, 증가율은 계속 두 자릿수대를 유지 중이다.

오스탈 신형 플랫폼 등 한화기술 적용 전망

>> 1면 ‘한화 상업선·군함’서 계속

미국 조선시장은 상업·물류 수요와 국방 조달 수요가 철저히 분리돼 운영되기 때문에, 두 영역을 모두 확보했다는 점 자체가 한화의 향후 사업 확장성을 크게 넓혀주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 협력 측면에서도 협업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화는 합정용 방산전자, EO·IR(전자광학·적외선) 센서, 자율화 기술, 통합전투체계 등 고급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은 자동화·운용 효율화를 중심으로 합정 현대화를 추진하는 흐름에 있어, 오스탈의 신형 플랫폼 개발이나 EPF 개량형 프로그래머서 한화 기술이 적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제도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제도인 확정급여형(DB) 비중이 49.7%로 가장 컸다. 또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26.8%)과 개인형 퇴직연금(IRP·23.1%)이 그 뒤를 이었다.

퇴직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전년대보다 4.3% 증가한 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인출 금액은 3조 원으로 12.1% 늘었다. 인출 사유는 주거비 마련이 82.0%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구입 56.5%, 주거 임차 25.5%, 회생절차 13.1% 순이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한화가 확보한 오스탈 지분 19.9%가 미 해군 수상함·잠수함 시장 진입을 노린 전략적 움직임”이라며 “오스탈 USA는 미 해군과 직접 계약해 배를 지을 수 있는 1급 조선소(Tier-1)이자 잠수함의 핵심 모듈을 공급하는 주요 협력 조선소(Tier-2)여서 한화가 미국 방산 조선 분야로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업선과 군함 시장은 조달 구조와 규제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영역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 조선 시장 전체와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한화가 향후 기술 협력과 신규 프로젝트 참여에서 선택지를 대폭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